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日 전범기업은 빠졌다

정부, 국내재단 통해 지급 발표
재원은 민간 기업 기여로 마련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금을 일본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4·6면〉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면제'를 신설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통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인적교류 단절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답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 "동냥 같은 돈 안 받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할머니가 6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외교부 '제3자 변제안' 거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가해자인 전범기업이 주는 돈이 아닌 피해국이 스스로 마련한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외교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일본으로 건너가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항공기 제작소에서 학교는 커녕 돈도 받지 못하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해방 후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말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가해국과 기업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배상 한 푼 받지 못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모든 게 해결 될 줄 알았지만, 5년이 지난 올해 정부가 오히려 가해자를 배고 재단을 꾸려 돈을 마련해 배상하겠다는 해법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양 할머니는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정부에서 준다는 돈 없이도 밥 굶지 않을 수 있고, 툴바줄 이틀도 많았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국이 주는 배상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외교부 결정을 승낙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대통령은 당장 옷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결안 결정에 있어 충분한 대화를 시도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례했으며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양 할머니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살아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모두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는데 감사함을 느끼며 힘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p>저희 [법무법인 형제]는 이번에 광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퇴임하신 최인규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p> <p>앞으로도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023. 3. 법무법인 형제 C&K Partners 대표변호사 기 세 운</p> <p>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598번길 7-23 서초빌딩 2층 ~ 4층 대표전화 : 062-233-8500 팩스 : 062-232-3200 업무개시일 : 2023. 3. 2. 사무소 초창일 : 2023. 3. 20(월) 11:00 ~ 20:00</p> <p>***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저는 1994. 3. 1.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23. 2. 20.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29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고 이번에 [법무법인 형제]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p> <p>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p> <p>◇ 주요 학력 및 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해남 출생, 광주 학강초, 송의중, 조대부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학과, 84학번) 사법시험 33회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장, 광주 남구/북구 선거관리위원장 광주지법 정충지원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순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미국 U.C. Berkeley 연수(Visiting Scholar) <p>2023. 3. 법무법인 형제 대표변호사 최인규 올림</p>

근로시간제 개편...주 52시간→최대 69시간 가능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연휴 휴식 보장과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충분히 쉬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불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편에 나서지만,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